

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
21-51

---

# '22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

---

2021. 12. 30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순 서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10대 중점과제 '22년 실행계획 ...	3
1. 한국판 뉴딜 .....	3
2. 탄소중립 .....	6
III. 향후 계획 .....	8

## I. 추진배경

### □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→ 포스트코로나 시대 **양대 핵심 아젠다**

-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,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 고조  
→ 디지털·그린 전환이 세계적 흐름\*으로 정착
- \* (디지털) 美·EU 등 주요국 초고속 통신망·AI 등 투자계획 경쟁적으로 발표  
(그린) 25개국 탄소중립 선언, 기후정상회의(21.4월), P4G 정상회의(21.5월) 개최 등
- 또한, 강도 높은 봉쇄조치와 사회·경제적 구조 전환 과정에서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 → 고용·사회안전망 수요 증대
- ⇒ 구조적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,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전략 수립

- ▶ **(한국판뉴딜)** 한국판 뉴딜 1.0(20.7월)에 이어, 뉴딜 2.0(21.7월)을 발표 → 디지털·그린·휴먼 + 지역균형 뉴딜(3+1) 체제 구축
- (디지털·그린)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, 저탄소 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
(휴먼) 불평등격차 해소, 사람투자 확대, 선제적 노동이동 지원 등 포용적 전환 추진  
(지역균형)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경제 혁신, 국가균형발전 견인
- ▶ **(탄소중립)**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경제질서로서 '어렵지만 가야 할 길'이라는 인식 하에, 탄소중립전략 수립(20.12월), '30년 NDC\* 상향(21.10월) 등 추진
- \*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(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)

### □ 특히, '22년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성과 창출을 위한 중요한 해

- **(한국판뉴딜)** '22년은 뉴딜 2.0이 본격 실행되는 사실상 첫 해<sup>1)</sup> → 휴먼 뉴딜 신설<sup>2)</sup> 및 디지털·그린 과제 대폭 확대
- 1) 재정투자(국비, 조원): ('20) 5.4 → ('21) 27.1 → ('22) 33.1
- 2) (뉴딜1.0) 고용·사회안전망, 사람투자 → (뉴딜2.0) 기존과제 + 청년정책, 격차해소
- 신규·확대과제 중심으로, 성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전략 필요
- **(탄소중립)** '22년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<sup>1)</sup> 첫 해 → 대대적인 재정·금융 지원<sup>2)</sup> +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도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
- 1) '18년 대비 '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: 당초 26.3 → 40.0%로 상향
- 2) 탄소중립 예산 확대('21년 7.7 → '22년 11.4조원, +48.1%), 기후대응기금(2.4조원) 신설

☞ '22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10대 핵심 과제 선정 → '22년 실행계획 마련·점검으로 차질없이 추진

## ※ 한국판 뉴딜, 탄소중립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

### □ (뉴딜) 한국판 뉴딜 추진전략 마련 + 입법·뉴딜펀드 등 인프라 구축

- (뉴딜 1.0) 디지털·그린 뉴딜 추진 +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(20.7월)
- (뉴딜 2.0)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여 디지털·그린 뉴딜을 확대하고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·개편(21.7월)

구분	뉴딜 1.0	뉴딜 2.0
디지털 뉴딜	DNA 생태계 강화, 비대면 산업 육성, SOC 디지털화 등	'초연결 신산업 육성' 과제 추가 → 메타버스·블록체인 등 지원
그린 뉴딜	도시·공간·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, 저탄소·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	'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' 과제 추가 → 국제적 탄소중립 논의 적극 대응
휴먼 뉴딜 (안전망 강화)	고용·사회안전망, 사람투자	'청년정책', '격차해소' 과제 추가 → 청년층 집중 지원 교육·돌봄격차 해소
재정투자	'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 '22년 국비 23.2조원	→ 220조원 (+60조원) → 33.1조원 (+8.9조원)
제도적 지원	뉴딜펀드, 뉴딜 입법과제	+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·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마련

- (인프라)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\* 중 28개 입법 완료 + 정책형 뉴딜펀드 5.6조원 규모 조성 및 뉴딜 인프라펀드 출시(21.7월)
- \* (뉴딜 1.0)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 → (뉴딜 2.0)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

### □ (탄소중립)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이행기반 마련, 국제협력도 지속

- (전략) 「2050 탄소중립 선언」 및 「탄소중립 추진전략」 발표(20.12월)
  - 국제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해 더욱 도전적인 목표 설정  
→ '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를 상향 조정'(21.10월)\*
  - \* '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당초 26.3 → 40.0% 로 상향
- (이행기반) 대통령 직속 '2050 탄소중립위원회' 출범(21.5월), 「탄소중립기본법」 제정(21.9월) 등 제도적·법적 토대 마련
  - 탄소중립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도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규과제\* 추가(21.7월)
  - \* 온실가스 측정·평가시스템 정비, 산단 자원순환시스템(폐기물 재자원화) 마련 등
- (국제협력)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(21.5월), 국제기구 공여 확대\* 등  
→ 국제사회 기후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 리더십 제고
  - \*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(GCF)에 2억달러 추가 공여 선언(19.9월) 등
  -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(COP26)에서 상향된 NDC 발표(21.11월), 205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선언 제안 등

## II. 10대 중점과제 '22년 실행계획

### 1. 한국판 뉴딜

- ◇ '22년에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대폭 확대된 **33.1조원 재정투자** ('21년 27.1조원) 및 **상반기 23.1조원(잠정) 조기 집행** 등 추진할 예정
- ◇ 특히, 최근 뉴딜 2.0 개편 취지(포용성 강화 + 구조전환 가속화)를 고려하여 '22년 정책 역량을 집중할 **분야별 중점 추진과제** 선정
  - (포용성 강화) 청년정책 + 격차해소(휴먼), 지역으로 뉴딜성과 확산(지역균형) (전환 가속화) D.N.A + 신산업 육성(디지털), 그린에너지 등 확산(그린) (인프라 구축) 뉴딜펀드 활성화, 사업구조개편 지원 등 법·제도개선

### 1 [휴먼뉴딜] 청년 생활안정 종합 지원 + 교육·돌봄격차 해소

#### 1 [청년지원] '22년부터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 본격 시행

구분	가입대상	지원혜택	시행
① 청년내일 저축계좌	연소득 2,400만원 ↓ + 기준중위소득 100% ↓	저축액(月 10만원)에 정부가 1~3배 매칭	7월
② 청년희망적금	총급여 3,600만원 ↓	저축장려금 최대 4%p 수준 지급 (1년 2% → 2년 4%)	1/4
③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	총급여 5,000만원 ↓	펀드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	상반기

#### ▪ (주거) '22년 상반기 중 청년월세지원제도\* 시행

\* 중위소득 60% 이하 무주택 청년(19~34세) 대상, 月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원

#### ▪ (교육) '22.1월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대폭 확대\*

\* ①기초·차상위(年 520→첫째 700만원, 둘째 등록금 전액), ②다자녀(8구간 이하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), ③서민·중산층(5~8구간 : 年 368~67.5→390~350만원)

#### 2 [교육격차 해소] '22년부터 '4대 교육향상 패키지\*' 본격 추진

→ 사회취약계층,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

\* ①기초학력 강화: 방과후·방학중 교과보충(3,200억원), 교·사대생 튜터링(1,050억원) 등

②다문화·장애학생 지원: 교육수요·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
③사회성 함양: 또래활동 등 사회성 회복(205억원), 정신건강 회복(15억원) 지원 등

④저소득층 장학금: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선발인원 확대(1,050 → 2,000명) 등

### ③ [돌봄격차 해소] 전국 시·도 사회서비스원<sup>1</sup> 설립<sup>2</sup>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

- 1] 공공부문이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, 돌봄서비스 제공  
2]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(누적): ('19)4개소 ('20)11개소 ('21)14개소 ('22)전국 17개소

-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\* 추진 중('22년까지 시범사업) → 선도사업 분석을 통한 통합돌봄 모형 개발 및 근거법률 마련('22.上)

\* 취약계층이 거주지역에서 주거·의료·요양생활 등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 지원

## ② [디지털뉴딜] D.N.A 혁신 강화 + 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경제 선도

### ① [D.N.A] 데이터댐 구축·개방 확대\*('22.1월~) 등 핵심 인프라 강화 + 지역특화 AI 융합지원 확대(6개 지역) 등 인공지능 지역확산('22.2월~)

\* AI학습용데이터(누적): (구축) (~'21)381 → ('22)691종, (개방) ('21)191 → ('22.上)381종

### ② [신산업]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신산업 육성 → 핵심인프라 구축·콘텐츠 제작지원 등<sup>1</sup> 1/4분기 개시, 육성전략 발표<sup>2</sup>

- 1] ①메타버스 플랫폼 발굴·지원(668억원, '22.2월~) ②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허브 구축(2개, '22.2월~) ③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(年 150명, '22.3월 교육생 모집), ④전통문화, 문화여가(패션·관광 등) 등 분야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(168억원)  
2] 메타버스·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전략 경대본 상정·발표 예정('22.1월~)

## ③ [그린뉴딜] 그린에너지·모빌리티 확산으로 저탄소 전환 가속화

### ① [그린에너지]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R&D센터 조성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은 1월부터 추진

-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용자지원(418억원), 자가 신재생 설비 지원사업(4만가구, 3,324억원) 등도 '22년 중 추진

### ② [그린모빌리티] 친환경차 보급 50만대(전기차 44.6만, 수소차 5.4만, 누적)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<sup>1</sup>, 제도개선<sup>2</sup>을 상반기 중 완료

- 1] '22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('22.2월)  
2] 저·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('22.上)

## ④ [지역균형뉴딜] 뉴딜 성과 지역 확산 가속화로 균형 발전 도모

### ① [지역경제 혁신] 한국판 뉴딜 연계 지역주력산업·특구 활성화<sup>1</sup> 및 지역뉴딜벤처펀드<sup>2</sup> 본격 투자로 뉴딜성과 지역 확산

- 1] 48개 지역주력산업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·사업화 지원('22년 2,010억원) 등  
2] 모펀드 조성('22년 예산 400억원) 및 자펀드(부산, 충청, 울산·경남) 본격 투자 추진

**② [지역주민 참여] '21년 공모 선정된 63개 우수 지자체 사업 본격 지원\* → 지자체·지역주민 주도 사업으로 성과 체감도 제고**

\* ICT 기반 민·관 통합 돌봄사업 등 주민주도형 뉴딜 사업(48개 지자체/756억원)+ 지자체 우수 뉴딜사업(15개/1,157억원) → 컨설팅 지원 등('22.1월~)

**⑤ [뉴딜펀드]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뉴딜펀드 신속히 조성**

**① [정책형 뉴딜펀드] '22년 중 4조원 결성(정부예산 6,000억원) + 이 중 2,000억원 규모는 '국민참여 뉴딜펀드' 출시**

※ 탄소중립,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투자 확대

- 기업투자 펀드는 운용사 선정 등 1/4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, 국민참여 펀드는 2/4분기 중 운용사 모집공고 추진

\* 기업투자 펀드: 운용사 모집공고(1월) → 운용사 선정(3월) → 자펀드 결성(年内)  
국민참여 펀드: 운용사 모집공고(2/4분기) → 대국민 펀드판매(3/4분기)

**② [인프라펀드] 1/4분기 중 제2호 인프라펀드(친환경 고속철도 임대) 출시, 후속 인프라펀드 출시 지원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('22.1월)**

**⑥ [법·제도개선] 선제적 사업구조개편·노동전환 지원 + 뉴딜입법**

**① [사업구조개편] 디지털·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→ 1/4분기 중 법·제도적 기반을 구축 완료 + 인센티브 제공**

- \* ① (지원전담기관) 대한상의 내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 설치('22.1/4)
- ② (법개정)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기업활력법·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 추진('22.1/4)
- ③ (인센티브) 사업재편 기업의 혁신적 기술개발(R&D)을 지원('22년 180억원), 5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 조성·운용('22.1/4)

**② [노동전환 지원] 산업구조 전환과정의 일자리 충격 최소화를 위해 직무전환·재취업지원 강화 → 특히, 인프라는 1/4분기 중 신속 구축**

- \* '22년 예산 : 41개 사업 10,385억원(고용부·산업부·중기부·과기부·환경부 등)
- ① (근로자지원)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(951억원), 장기유급휴가훈련(360억원) 등
- ② (사업자지원) 근로자 직무전환교육·전직지원 시 노동전환지원금 지급(53억원)
- ③ (인프라) 노동전환 분석센터(인력수급 전망 등, 1월)·지원센터(컨설팅 등, 3월) 설립

**③ [뉴딜입법]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데이터 기본법, 그린 뉴딜 기본법, 기후변화대응법 등 28개 법률은 입법 완료**

- 개인정보보호법 등 잔여 법률 조속히 입법추진 + 既 통과 법률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, 지원조직 정비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

## 2. 탄소중립

- ◇ '22년은 본격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해 → 2.4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+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 등 추진 인프라 구축
- ◇ 또한, '22년부터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적용 →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개편,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본격 추진

### 7 기후대응기금 신설, 1/4분기 조기 집행 및 법·체제 완비

- ①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 ('22년 2.4조원) → '22.1월 운용 개시, 4대 핵심분야\* 집중 투자
    - \* ① 탄소저감 설비전환 지원, 도시·국토 저탄소화 등 온실가스 감축(0.9조원), ② 유망기업 지원, 인력양성, 녹색금융 등 신유망·저탄소 생태계 조성(0.6조원), ③ 취약산업·계층 기후변화 대응·적응 지원, 국민참여 확산 등 공정한 전환(0.2조원), ④ R&D 지원, 온실가스감축제 운영 뒷받침 등 제도·기반구축(0.6조원)
  - 특히, 1/4분기 40% 이상 조기집행 추진 목표(상반기 70% 이상) → 기업·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 촉진
- ② 1/4분기 중 기후기금 운용을 위한 법령·추진체제도 조속히 완비
    - 탄소중립기본법 시행(3.25일)에 맞추어 시행령 제정·공포 + 기금운용심의회\* 구성(1월), 실무협의체 운영 등 협조체계 구축
    - \* (위원장) 기재부 1차관 + (위원) 관계부처 국장, 민간위원

### 8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 → 금융시장 정착 단계적 지원

- 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 → 탄소중립·환경보전에 기여하는 '녹색경제활동'의 판단근거를 제공하여 녹색금융 활성화
  - 산업구조·에너지믹스 등 어려운 現 탄소중립 여건을 감안, 전환 부문(탄소중립 전환 위한 과도기 경제활동) 등 폭넓은 녹색활동 인정

#### < 녹색분류체계 주요 내용 (☞ 참고) >

- ① (철강) 온실가스 업계상위 20% 수준(BM 상위 20%) 외에 ISO 최적가용기술(BAT) 목록이 제정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적용 가능 추가
- ② (수송)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국제추세 고려하여 무공해차량만 인정
- ③ (블루수소) LNG 추출 수소 대비 온실가스 60% 이상 감축하는 수소 생산(전환활동)
- ④ (LNG 발전)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340g CO<sub>2</sub>eq./kWh 이내이며, 향후 경제적 수명기간 평균 250g CO<sub>2</sub>eq./kWh 달성 계획 제시(전환활동)

- ②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채권·PF 등 프로젝트 단위 금융상품 대상 우선 적용\*('22년)

\*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 전 시범 적용, 산업·금융업계 실무협의 등 통해 애로사항 보완

-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한 「녹색채권 가이드라인」 개정안을 '22년 중 마련('23년부터 적용)

## 9 상향된 NDC와의 정합성 등 고려, 배출권거래제도\* 개선 추진

\*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게 매년 배출허용량(배출권)을 할당하고, 기업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

- ① 상향된 NDC 등 고려, 부문별·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(감축경로) 재설정, 「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」 수립 시 반영('22년중)

-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감축목표 수정 시 배출허용총량 등 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할당계획('21~'25)」 변경 검토

- ② '22년 중 배출권 거래 활성화<sup>1)</sup>, 기업의 감축 유인 강화<sup>2)</sup> 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추진

1) 증권사 등의 배출권 위탁매매, 장내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

2) 차기·추가 배출권 할당시 기업의 내부감축 실적을 보다 폭넓게 인정 (대기업의 중소기업 감축활동 지원,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등)

## 10 재정·금융지원 등 확대 →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고

- ① [재정·금융] 온실가스 감축성과와 연계하는 재정지원 시범사업 추진<sup>1)</sup> + 탄소저감 효과에 따라 우대 지원하는 융자·보증사업<sup>2)</sup> 신설

\* 1)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(중기부, '22년 54.5억원) 신규 추진

2)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(산은, '22년 5조원), 기후대응보증(신·기보, '22년 1조원)

- 재정·금융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\*를 1/4분기 중 완료

\* (재정) 사업자 선정(1~3월) / (금융) 탄소스프레드 참여 은행(산은 등) 선정(2~3월), 신·기보 기후대응보증 계정 설치(1~3월)

- ② [세제] 탄소중립 관련 기술<sup>1)</sup>을 세법상 신성장·원천기술의 범위<sup>2)</sup>에 추가하여 세액공제 확대(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, '22.2월)

\* 1) ① 철강·시멘트·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 중심 주요기술,

② 그린수소 생산·전기가열나프타 분해기술 등 선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혁신기술

2) 공제율(%) : (일반 R&D) 대기업 2, 중소 25, (신성장·원천기술) 대기업 20~30, 중소 30~40

### Ⅲ. 향후 계획

- 금번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'22년 10대 중점과제 차질없이 추진
- 뉴딜 관계장관회의·분과회의,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과제 추진 현황 지속 점검

10대 핵심과제	추진일정	담당부처
----------	------	------

한국판 뉴딜	① 청년 생활안정 종합 지원 + 교육·돌봄격차 해소	'22.1월 ~	국토부, 금융위, 기재부, 복지부, 교육부
	② DNA 혁신강화 + 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	'22.1월 ~	과기부, 문체부
	③ 그린에너지·모빌리티 확산으로 저탄소 전환 가속화	'22.1월 ~	산업부, 환경부
	④ 뉴딜 성과 지역확산 가속화로 균형 발전 도모	'22.1월 ~	행안부, 중기부
	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뉴딜 펀드 신속히 조성	'22.1월 ~	기재부, 금융위
	⑥ 선제적 사업구조개편·노동전환 지원 + 뉴딜입법	'22.1월 ~	고용부, 산업부, 환경부, 과기부, 기재부

탄소중립	⑦ 마중물 재정투자를 위한 기후대응 기금 신설, 1/4분기 조기집행	'22.1월 ~	기재부
	⑧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 → 금융시장 정착 단계적 지원	'22년 중	환경부, 금융위
	⑨ 상향된 NDC와의 정합성 등 고려,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추진	'22년 중	환경부, 기재부
	⑩ 재정·금융지원 등 확대 →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고	'22.2월 ~	중기부, 금융위, 기재부

## 참 고

## 한국형 녹색분류체계(K-Taxonomy)

- (그간 추진현황) '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'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 추진
  -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'녹색경제활동'의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녹색금융 확대 및 녹색위장행위(그린워싱) 방지
- ⇒ 산업계, 금융계, 시민사회 및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※ 환경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최종 발표 예정

### ※ 녹색분류체계 개념 및 기본 방향

- ▶ (법적성격)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자발적 지침
- ▶ (기본방향) 산업구조·에너지믹스 등 어려운 現 탄소중립 여건을 감안, 전환기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폭넓은 녹색활동 인정
- ▶ (구성) 2개 부문, 69개 경제활동(녹색 64개, 전환 5개)
  - (녹색부문)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
  - (전환부문)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(한시적 인정)
- ▶ (주요 내용 예시)
  - ① (철강) 온실가스 업계상위 20% 수준(BM 상위 20%) 외에 ISO 최적가용기술(BAT) 목록이 제정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적용 가능 추가
  - ② (수송)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국제추세 고려하여 무공해차량만 인정
  - ③ (블루수소) LNG 추출 수소 대비 온실가스 60% 이상 감축하는 수소 생산(전환활동)
  - ④ (LNG 발전)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340g CO<sub>2</sub>eq./kWh 이내이며, 향후 경제적 수명기간 평균 250g CO<sub>2</sub>eq./kWh 달성 계획 제시(전환활동)

- ('22년 중점 추진사항)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채권·PF 등 프로젝트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
  - 「녹색채권 가이드라인」 개정 및 금융권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의 신속 정착 지원
- (추진계획) 산업계 및 금융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점 개선
  - ※ '22년 도입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'23년 「녹색채권 실무매뉴얼」 마련 추진, 중장기적으로 채권 외 금융상품(여신, 투자 등)으로 확대, ESG 정보공개 등에 적용 검토